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김 경 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금년 1995년은 태평양 전쟁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제 침략기간중 일본군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가 회복되고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아시아인들 전체가 참된 의미의 기쁨을 향유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이 시점에서 제 3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열어 함께 전후 50년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2월 초 무라야마 내각은 전후처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가칭) 구상의 명칭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으로 하고, 10억엔 정도를 국민모금으로 조달하는 한편, 정부는 홍보, 사무비 등으로 5억엔을 보조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100명 전 군대위안부를 일시금 지급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며 지급액은 일인당 100만엔 이하로 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정부주도의 민간위로금안에 대하여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고, 지금도 절대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이 위로금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국과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발표한 전후보상안은 적어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아시아의 주변국가들이 어느정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올수 있을 만큼 이행되어야 한다.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배상의 태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배상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얼마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과거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가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태도가 결여되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해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거부권을 갖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아시아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왜 일본이 불신을 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진실된 과거에 대한 사죄가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피해자에게 민간모금으로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더구나 일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 명분을 세우기 까지 한다는 것은 과거 책임을 덮어 둔 눈가림으로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그리고 진실된 사죄는 국회결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일본수상들이 공식석상이나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지만 개인의 사죄는 내각의 각료들에 의해서 도전받거나, 부인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죄는 일본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전체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

2.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야만적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이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 범죄는 부녀매매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육전의 범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권침해 배상책임과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온 것에 대한 “불처벌의 책임”도 져야 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해결방법도 일본정부가 피하는 마당에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감안하여 개인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국제법률가협회는 94년 11월 22일 권고문을 내어 위안부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도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도대체 이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강제연행소녀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응당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준다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범죄성에 대해 민간인 스스로가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이제 끝이 났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피해국에 당사자들은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들이며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어떤 돈으로 위로를 할 수는 없다. 50년전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인권과 명예는 일본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범죄적 성격은 가리워지고, 민사적인 성격, 돈의 문제로 왜곡되어 할머니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응당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간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여 준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가해자를 미화시키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 시키는 처사인 것이다. 전쟁중에 일어난 조직적인 강간에 대한 비난은 받아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는 벌써 150여회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위로금은 너희 일본거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배상하라.” 할머니들은 오늘도 절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할머니 증인 집회후 어느 일본여성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딸들이 지금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런데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세계 다른 나라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싱가포르에 사는 내 친구의 말이 한국 아버지들은 돈받고 딸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의 조공녀, 미국의 양색시, 오늘날 기생관광도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은 일본사람의 시각에서 본 한계이다. 세계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임금이 기획하고, 입안하여 군대,경찰 통제하에 점령지 13-18세의 소

녀들을 20만명이나 몰았다고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면서 성노예를 삼다가 전쟁에 지고 떠날때는 어린 여성들을 유기, 살상하고 기록을 없애서 역사속에서 폐기처분했 습니까?)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민간위로금으로는 절대로 은폐할 수 없는 역사에 다시는 있 이서는 안될 사건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평화를 공유하고 살자면 진실된 사죄와 배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법 질서에 대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 다. 즉, 일본정부가 민간모금 위로금안을 철회하고, 개인에게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 상하녀 후세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아시아에 있는 피해자 당사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더욱 끈고히 하자. 진실이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